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08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
피 고 ○○시 ○○출장소장
변 론 종 결 2023. 10. 19.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 가. 2021. 5. 26. ○○시 B 대 900㎡ 및 위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취득세 및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 나. 2021. 7. 23. ○○시 B 대 900㎡ 및 위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



재 각 재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7. 설립되어 일반 교과학원,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1. 4. 매매를 원인으로 ○○시 B 대 90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후 이 사건 부지 위에 노유자 시설(어린이집) 용도의 건축물(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804.4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18. 3. 16.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1. 4. 이 사건 부지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 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77조의2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 1,787,392,560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12,322,99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8. 4. 25. 이 사건 건물을 위 법 제19조 제1항, 제177조의2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가액 4,330,201,331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20,525,1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취득세 감면 현황을 참조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2017년도 - 2020년



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을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물건	과세연도	과세표준	재산세(원)	지역자원 시설세(원)	지방교육세 (원)	합계(원)
건축물	2018	1,568,566,170	588,200	3,709,140	117,640	4,414,980
	2019	1,581,641,241	593,110	3,740,530	118,620	4,452,260
	2020	1,592,075,989	597,020	3,765,570	119,400	4,481,990
토지	2017	793,170,000	237,950	-	47,590	285,540
	2018	821,520,000	246,450	-	49,290	295,740
	2019	963,900,000	289,170	-	57,830	347,000
	2020	977,760,000	293,320	-	58,660	351,980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의 일부분이 어린이 전용 수영장으로 사용 중이었고(지하 1층), 건물 대부분이 미사용 상태로 있다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원고에게 2021. 3. 5. 원고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대하여, 2021. 3. 9. 원고가 감면받은 재산세 등에 대하여 각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2021. 4. 27. 취득세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2021. 4. 2. 재산세에 관하여 ○○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각 청구하였으나 2021. 5. 31., 2021. 5. 18.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사. 피고는 2021. 5. 26., 2021. 7. 23. 별지 1 기재와 같은 각 취득세, 재산세 부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8. 13. 조세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고 이후 어린이집 인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에서 탈락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인가받지 못하였고, 지자체가 임의로 정원율을 조정하는 등 정원율 미달로 인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민간어린이집 설치를 인가받지 못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로 인하여 어린이집 인가 신청이 더욱 어려워졌던바, 이후 민간어린이집 인가를 얻지 못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위와 같이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하여 지하 1층과 지상 5층을 임시로 수영장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적어도 지상 1 - 4층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르면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는 적어도 이 사건 건물을 짓는 동안 어린이집 설치·운영 목적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의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

다. 피고가 각 연도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7. 6. 1.부터 2020. 6. 1.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매년 재산세를 감면하여 부과하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나)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1948 판결 참조).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는 어린이집의 종류로 제1호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규정하고 있고, 제2 내지 7호에서는 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경우 이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제1항), 같은 법 제54조 제4항 제1호는 구청장 등의 인가를 받지 않고 국공립어린이 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를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구청장 등은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13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시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매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 신규인가 기준 및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이 위치한 동탄 3동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이 사용허가된 2017년 4월 말 이후 줄곧 어린이집 신규인가 제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고, 원고에게 예외적으로 신규인가를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016년 ~ 2019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인가 제한기준	○ 관할 행정 읍·면·동별 정원충족률이 90% 미만일 경우 신규인가를 제한



	하며 90%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범위 내에서 보육수요를 검토하여 신규인가를 허용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공공·직장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대규모 개발지구 내의 어린이집 등의 경우 신규인가 가능	
충족률 반영시기	매년 4월 말	
C동 ¹⁾ 정원충족률 현황	2016년 4월 말 기준	86.3%
	2017년 4월 말 기준	87.2%
	2018년 4월 말 기준	86.7%
	2019년 4월 말 기준	85.6%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린이집을 신설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관할 구청장 등의 인가가 필요하다. 민간어린이집의 인가는 구청장이 매년 공고하는 수급계획 공고의 내용 및 신규인가 추천 경쟁률에 따라 좌우되는바, 어린이집 설치·운영 목적으로 취득세 등에 대한 감면신청을 한 원고로서는 보육시설 포화상태 여부 등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신규인가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다) ○○시 여성보육과에서는 2015. 11.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부서간 '협의결과내역'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어린이집 수급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며, "향후 신규인가 불가에 따른 어린이집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물질적 피해 등의 사항은 전적으로 건축주 책임 사항임"이라고 회신하였고(갑 제14호 증), 원고 또한 위 협의결과내역을 수령함으로써 어린이집 보육수요의 변동에 따라 신규인가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하여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어린이집 신규인가 관련 민원에 대하여 피고는 일관되게 어린이집 신규인가는 원칙적으로 수요에 의하여 좌우되는 문제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18. 5.경 관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제안

1) 이 사건 부지가 속한 행정동이다.



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설립 관련 공모사업지원제도에 공모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국 탈락하였고, 그것만으로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20년 어린이집 인가 제한기준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가 2020. 3.경 어린이집 수급계획 공고를 하면서, 2019. 12. 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정원충족률이 90% 미만일 경우 신규인가 제한)과 달리 정원충족률²⁾이 ○○도 평균(83.8%)에 이르지 못하거나, 정원공급률이 50%를 초과할 경우 인가를 제한한다는 취지로 신규인가 기준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을 제16호증). 그러나 이는 ○○○○부의 지침 및 당시 ○○시의 어린이집 수요에 따른 변경으로 보이고³⁾, 기준을 원고하게 불리하도록 임의로 변경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기존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2020. 4.경 기준 C동의 정원충족률이 90%를 초과하였을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원고는 2020.경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신청하지도 아니하였다.

바) 원고가 지적하는 D의 어린이집 신규인가 등의 경우,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지구 및 신축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으로서 위 인가제한 기준의 예외에 해당하여 신규인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정원충족률: 관내 어린이집의 현원/관내 어린이집의 정원
정원공급률: 관내 어린이집의 정원/관내의 보육대상 인원수

3) 정원공급률 50% 초과시 인가를 제한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것은 아니었으나, 위 지침 발표 당시 화성시의 영유아 중 약 50% 이상이 유치원에 다니거나 가정 양육을 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은 나머지 50%의 수요만 충족하면 된다는 취지이다.



나. 이 사건 건물 건축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한 '직접 사용'에 해당하여 해당 건축 기간 토지의 재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위 '직접 사용'은 유치원 등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고, 그 재산세 면제의 취지에 걸맞게 운영되는 데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재산세를 면제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 부지 위의 건물이 어린이집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건물의 건축기간동안 그 부지가 유치원 등의 설립·운영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준공 이후 어린이집 용도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와 같이 예정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지도 않다.

3) 한편 ○○시 시세 감면 조례 제12조는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는데, 위 조례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제3조), 문화재(제4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제5조),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제6조), 도시형공장(제7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제8조), 시장현대화사업(제9조),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제10조), 자동이체 납부(제11조) 등



에 관하여 감면 사항을 규정할 뿐,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 시세 감면조례에서 '직접 사용'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를 이 사건 처분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감면 조례의 취지가 이 사건과 같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한 번도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해당 건축물의 예정 용도만으로 건축물 부지의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면서 신고한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그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도 이미 감면한 재산세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과소 납부가 보호의 대상이 될 만한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엄○○

판사 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판사 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별지 1

취득세(2021년 부과기준-가산금 제외)

구분	당초본세	가산세	본세합계(가산세포함)
[기계실,1층,2층,3층,4층] 건물 1756.48㎡	72,845,850	25,821,300	98,667,150
[지하1층] 건물 606.24㎡	25,142,360	10,959,490	36,101,850
[5층] 건물 441.76㎡ 추정	18,320,940	7,650,770	25,971,710
[기계실,1층,2층,3층,4층] 563.6800㎡	43,771,100	15,370,770	59,141,870
[5층] 141.7700㎡ 추정	11,008,550	4,560,330	15,568,880
[지하1층] 194.5500㎡	15,107,370	6,534,750	21,642,120
	186,196,170	70,897,410	257,093,580

재산세(2021년 부과기준-가산금 제외)

구분	당초본세
2020년 토지분	4,296,810
2019년 토지분	4,232,500
2018년 토지분	3,571,850
2017년 토지분	3,440,300
2020년 건축물#4	6,288,700
2019년 건축물#3	6,247,470
2020년 건축물#5	6,195,840
	34,273,470

취득세+재산세 본세 합계 291,367,050 <---가산금제외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 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



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벌칙)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18. 7 . 13.] [조례 제1346호, 2018. 7 . 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



다)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75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0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① 「○○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율은 100분의 50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은 “5년”을 “13



년"으로 하고, "2년"을 "2년"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 ①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안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조성된 택지개발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정한다)내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한다)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로서 기존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 ①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급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특1급 관광호텔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1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특1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3.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특1급 관광호텔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 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2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